

북한 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의 한국의 선택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 II. 높아지는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
- III. 중국의 대처 방안
- IV. 뛰는 한국의 '몸값'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북한 핵 위기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사국 중 핵심 주체인 북한이 연내 핵 불능화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참가국들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북-미 관계인데, 조심스럽게 북-미 관계 회복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여러 각도에서 이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 핵 실험 이후 조성된 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망을 갖고 어떤 전략적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II. 높아지는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

북한 핵 실험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미 현실에서 파괴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미 북한을 실재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특히 최근 흘러나

오는 북-미 수교를 염두에 두는 대폭적인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과 관련된 소식들은 이러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관련 시나리오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해왔고, 미국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핵 실험이라는 카드를 뽑아들면서 미국을 압박했고, 이에 미국이 마지못해 응수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변화된 미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 미국 내 민주당계 싱크탱크의 생각을 전해 듣고 그 상상력과 현실 적응력에 혀를 내둘렀다. 물론 이들이 민주당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 다수당이고,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흘러버릴 이야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한 이상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실재적인 핵 보유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6자 회담에서 진행 중인 핵 불능화는 이번 핵 개발과 실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 한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고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계속적으로 핵의 적대적 및 군사적 사용과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에 대한 제어와 더불어 통제를 하게 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외교 ·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방안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조치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그 범위를 동아시아로 보다 확대해 본다면 기왕 북한이 원하고 있는 바에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잠재적 위협 대상인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틀로 바라본다면,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 논의의 급진전 등이 예상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북한 핵의 시리아 이전설과 같은 장벽을 넘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인가와 같은 복잡한 변수들의 조합이 맞아 떨어져야 하지만 말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현재 사실상 북한 핵의 ‘폐기’가 아닌 ‘통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열어두고 고민하고 움직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해석해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성급한 국회 통과와 같은 행동은 이 같은 맥락에서 그다지 한국에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한국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Ⅲ. 중국의 대처 방안

북-미간의 심상치 않은 조짐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핵 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냉전 시기 이후 취해온 강대국 간 등거리 외교 노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냉전 시기에도 구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을 채택했었다. 문제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이 핵 실험을 하기 전까지 이 노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표면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놀랍게도 ‘중국이 냉전 후기 급진적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구소련을 견제했던 경로’를 북한이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역사속의 구소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환영한다는 외부적인 공식 입장과는 달리, 자국의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급속한 북-미 관계 개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북한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접촉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정말 원치 않는 것은 북-미 관계개선과 정상화이다. 중국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서 중국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그는 2002년 북한이 유럽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 개발을 위해 진행하려던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양빈(楊斌)을 구속 시킨 것, 올 상반기 BDA 사태 발발 당시 국제 신인도를 이유로 북한 자금의 중국 은행 경유를 거부한 것 등을 들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미간의 급속한 관계 정상화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고를 받지 않을 정도의 태클도 과감하게 북한에게 건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 약속했던 중국의 지원은 실재적인 지원 없이 생색내기용이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서서히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왔던 것이다. 결국 자구책은 독자적인 핵 실험 강행 그리고 실험 20분 전 중국 측 통보라는 대응이었다. 9월 19일 예정되었던 6자 회담이 북한 측의 거부로 돌연 연기된 것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국 측의 중유 5만 톤 지원이 연기된 것이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역시 두 축의 하나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하위 파트너로 상정하고 2003년부터 실시 중인 동북진흥계획이고, 다른 한 축은 한국과의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다. 동북진흥계획은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는 이 지역 산

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오염 및 환경 파괴 그리고 낙후 산업의 기타 지역 및 국가로의 이전이다. 즉 이를 위해 필요한 배후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이 유력한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중국과 북한은 '국제적 산업 분업체계'로 묶이게 되어, 중국은 한편으로는 원자재 및 낙후 산업 기지를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큰 정치 및 안보 관계가 아니라 지속성이 큰 경제적 관계로 북한을 묶어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계획의 성패는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미 중국은 북한의 탄광과 원유의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의 적극적 발전이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 소원 내지 불협화음의 표면화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빛이 나는 전략이다. 즉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개입 경로를 마련해두자는 속셈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필자는 현재 산 · 관 · 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 측이 유난히 성급한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뛰는 한국의 '몸값'

이상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결국 북한 핵 실험 실시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및 전략적 '몸값'이 뛰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측 모두로부터 예전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이 선택할 카드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필자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만만디'로,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분단을 종결시키고 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단순히 감성적이고 당위적인 판단이 아니라,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한반도의 위상과 이익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다. 명분의 측면에서,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한반도의 양 주체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위기는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통일을 고려하는 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동시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떳떳하다.

경제적 실리의 측면에서, 특히 중국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자국 산업 구조로의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영역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한발 빨리 대

처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이제는 타국의 의도에 대한 불순성을 따지기보다,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이다. 따라서, 다소 거칠게 수사적으로 말한다면, 항간에는 남-북 CEPA로도 회자되고 있지만 FTA를 맺더라도 북한과 먼저 맺어야 하며, 미국 및 중국과는 다소 시간을 끌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의 '몸값'은 현 시기에는 매우 높다.

V. 나가며

자구책으로, 생존 전략으로 강행한 북한 핵 실험은 의외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 중의 하나가 한국의 역할 증대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실제적으로 배제하고, 통일 이후 전략 마련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포석을 두어야 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 핵심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하고, 남-북 관계의 실제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원래 타임 스케줄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조정과 재 고려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오랜만에 찾아온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국익과 한반도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국면이 달라졌을 때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200709/19)

